

## 종합·해설



강운태



박광태



양형일



이용섭



전갑길



정동재



조영택



박준영



이석형



주승용

사진은  
기나다 순

# “위기의 광주·전남 내가 살린다”

## ■ 후보자 잇단 출사표…불붙은 민주 시·도지사 경선 레이스

6·2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광주시·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 장 선거의 경우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고, 일부에선 '후보 단일화'설까지 흘러나오고 있

어 막판까지 '흔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후보군은 3명에 불과 하나 주승용 의원의 도당 위원장 겸직 문제가 초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입지자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 광주 7명 2강 3중, 전남 3명 박지사 독주

### ■ 후보 난립과 판세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강운태 의원과 박광태 시장이 '1강 1중' 또는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의원, 전갑길 광산구청장, 정동재 전 문광부장관, 양형일 전 의원이 추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준영 지사가 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합평군수

가 뒤를 쫓고 있다. 박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2위 주의 원과의 차이가 20% 이상 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유'를 갖고 당분간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주 의원과 이 전 군수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박 지사도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 캠프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과 이 전 군수는 이미 출마선언을 한 뒤 현재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지

지기반을 넓히며 지지를 높이기에 여념이 없다.

경선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후보별 대립 각도 볼 만하다. 정책 이슈화를 통한 후보 간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 후보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강 의원과 정 전 장관은 올해 광주시 예산 확보와 관련, 박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며 박 시장과의 대립각을 세웠고, 전 청장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과 강 의원을 상대로 의원직 사퇴와 시장 출마 여부 여

### ■ 광주시장 출마 예상자

이름	나이	정당	직책
강운태	62	민주당	국회의원
박광태	67	민주당	현 광주시장
이용섭	59	민주당	국회의원
전갑길	53	민주당	광산구청장
정동재	60	민주당	전 문광부장관
조영택	59	민주당	국회의원
양형일	59	민주당	전 국회의원

### ■ 전남지사 출마 예상자

이름	나이	정당	직책
박준영	64	민주당	현 전남지사
이석형	52	민주당	전 합평군수
주승용	58	민주당	국회의원

론조사에 대해 연일 팽공을 펴보고 있다. 이석형 전 합평군수는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을 향해 "당원 간 담화는 도 위원장 공직 자리를 활용한 인지도 상승과 사조직을 겨냥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도당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각을 세웠다.

반면, 박 시장은 최근 민주당 경선방식과 관련해 "중앙당에서 논의되는 시민배심원제를 적극 요청했다"며 "당내 기여도나 청렴성, 민주화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 경선을 어떻게 되나

각 후보들은 민주당 '경선률' 항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배심원 제도와 국민경선제의 '오픈 프라이미터' 도입이 자신들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후보는 시민배심원 제도 보다 국민경선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국민경선의 경우 중앙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는 가급적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강운태·주승용 의원은 비롯한 이석형 전 합평군수 등이 국민경선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군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단체장 경선은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국민 참여 경선 시행 70% 이상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국민여론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자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 ■ 관전 포인트

이번 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협력 국회의원 3명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의원직 사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운태·이용섭·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에 맞서 2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당도 의원직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고려하지

## 국회의원직 사퇴·후보 단일화 여부 촉각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이 의원이 "만약 당과 시민이 원한다면 경선 시점 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화'다. 현재 박 시장과 강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 지지율이 10%대 미만의 흔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후보군들 사이에 '후보 단일화' 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용섭 의원이 현재 후보 단일화에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경선 막판 '후보 단일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 세종시 수정 3대 시나리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지 17

일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종시의 행보는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찬·반의 균형주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 당장은 여야의 조기 진당대회, 벌게는 6·2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 수정안 통과시=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와 스위스 다보스 출장을 마친 뒤 2월초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수정에

정안 재수정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행정부처 분할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 콘셉트가 맞는 일부 부처 이전은 타협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정안의 세종시 개념이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나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등이 이전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여(與興), 여야(與野) 협상을 통해 재수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는

나는 관측이 나온다.

◇ 수정안 무산시=친박과 야당의 반대가

강고하고, 여론 설득에도 실패할 경우 정부의 수정안은 난감

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여권은 여전히 제대로 성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회 처리를 시도할 수 없는 만큼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건갈 가능성이 크다.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은 자칫 여권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대통령이 대선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과감히 포기했듯이 세종시 수정도 전략적으로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주동력은 떨어지게 되지만, 박 전 대표는 차기 유력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차등 지원을 전남도 요청

전남도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지역 투자유치 여건 악화를 우려해 기업유치 제도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토지 가격이나 세제 혜택 등 상대적으로 산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수도권의 '과밀억제권'

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소재 기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7년간 100%, 3년간

50%씩 감면해 주는 제도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수도권 인접 지역 편중 이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등이 포함돼 기업 지방 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98,000~

한국에서 떠나는 일본 여행  
일본 문화체험  
379,000~  
419,000~499,000~

한국에서 떠나는 일본 여행  
일본 문화체험  
549,000~

한국에서 떠나는 일본 여행  
하이난  
799,000~  
849,000~  
999,000~ 1,249,000~  
1,049,000~ 1,299,000~

무안에서 상해로..  
309,000~  
469,000~